

尹 “한미일, 아세안 인태전략 조율하고 신규 협력 발굴”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 “태평양도서국 해양안보 지원” “한국, 전쟁 딛고 선진국 도약...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3국은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밤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이후 첫 다자회의로써 해당 협의를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은 3국의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실질적인 협력과 미래 비전으로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아세안 특화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언급하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KASI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산 협력 및 국방당국 협의 확대, 사이버안보·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퇴역함양도 등을 통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및 AI 기반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2024~2028), 매공강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이 포함됐다.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메탄공동 파트너십(2023-2026)을 통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기여 등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많은 해양국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하다”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역대 현안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파렴치한 대선 공작 실체 드러나” 맹공

여야 ‘대장동 허위 인터뷰’ 공방 민주 ‘국정 난맥상 전환 카드’

6일 여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싸고 맹공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을 노린 정치공작이다”며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이나 법적 조치 여부 등 당 차원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지도부는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파렴치한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적고, 당시 해당 인터뷰 음성파일 링크를 게시한 이 대표 개인 SNS 계정을 캡처해 공유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려 시도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 조승래 당시 민주당 대선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한 브리핑 내용을 공유하면서 “희대의 공작정치”라고 썼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단순히 가짜뉴스 정도의 사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김대업 게이트’에 이은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들려고 했던 대선 조작 개입”이라며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흥분도 장군 흥상 이전 논란 등 이념,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여권이 이번 의혹을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터뷰 내용을 이 대표와 연결시켜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전환, 국정 무능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카드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그렇다고 하면 12월 대장동 관련 특검에서 이걸 밝혀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4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이들 법안이 12월 말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검 수사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모든 국정 난맥상을 벗어나려는 프레임 전환용 카드로, 민주당이 말려들 필요가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지도부도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한 것을 맹비난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조직폭력배 동원해갖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이라며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軍검찰단 박정훈 수사단장 구속영장 보니 “혐의자 특정 말라” 국방장관 지시 있었다

지시 없었던 장관 발언과 달라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체포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부터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정중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기술됐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기술로 보인다.

다만,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에게 전달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